

제3장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

I. 경제사회 전망

□ 세계경제 전망

-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,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
 - 미국의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일본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
 -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소비와 수출 등 일부 실물경기지표의 개선 추세가 둔화
- IMF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반영하여 2013년 성장률을 0.2%p 하향 조정한 3.3%로 전망하였으며, 2014년 성장률은 4.0%로 예상
 - IMF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2013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,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□ 국내경제 전망

- 우리 경제는 2013년에 2.6%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,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.6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2013년에는 작년의 경기둔화로부터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, 2.6%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3.6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
- 내수는 민간소비가 실질구매력 상승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투자도 점차 개선될 전망
 -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개선과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013년에는 2.3%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3.4%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
 - 투자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모두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
- 소비자물가는 2013년에 낮은 상승세를 지속한 후, 2014년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II. 재정운용 여건

1. 세입 전망

- 내수회복,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'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
 - (지방세)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·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자동차세·지방소비세도 상승될 전망
 - (세외수입)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, 지가상승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 예정('13년)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 존재
- 국세수입은 경제위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, 감세의 정도가 완화되어 과거 5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의존 재원 수입도 영향 받을 전망
 - (지방교부세)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는 기존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 예상*
 - *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('12.10) : '12~'16 총 국세 증가율 6.2%, 내국세 증가율 7.0%, 교부세 증가율 6.9%
 - (국고보조금)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, 안전 분야,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

□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

-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조기상환,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

2. 세출 전망

□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(공약가계부)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지속 증가 예상

-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,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,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
- 어린이집,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,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 노령사회 대비
- 사회복지공무원 확충,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허브기관화 등으로 수요자·현장 중심의 One-stop 서비스 강화

※ '14년까지 사회복지인력 7천명 확충 추진 중('11.9월 관계부처 합동)

□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

- 박근혜 정부의 「지역공약 이행계획」에 따른 해당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 발생
-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과 주택·건설·토목 등 지역개발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, 민선 6기 선거 정책공약 등에 따라 신규사업 확대 예상
- 자연환경조성, 수질개선, 상·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환경 관련 지출 증가,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

Ⅲ. 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

1. 중기재정운용 목표

기본 목표

- ◇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 운영
- ◇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
- ◇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

2. 자원배분 방향

□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

- 투·융자심사 등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하고, 기존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
- 재정사업 자율평가, 심층평가,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를 보다 엄격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
- 유사·중복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통폐합, 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추진하고, 부서간 유사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로 중복투자를 방지

□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및 삶의 질 선진화

- 일을 통한 자립,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'일'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
-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·교육·주거 등 생애주기별, 서민·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삶의 질 개선

□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

-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주력
- 서비스산업 선진화, 중소기업 역량강화,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기반을 강화

